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스쿨 미투' 키웠다

광주여성단체 '학교성폭력 해결 집담회'... 땀질처방 지적 전체학교 전수조사·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시행 요구

성희롱·성추행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 당국의 땀질처방이 반복적인 학교 내 성폭력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쿨 미투'로 불리는 교내 성폭력에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성폭력전담대학기구 마련, 광주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16일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인화회 등의 주최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반복되는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광주 모 학교 성추행·성희롱 사태를 계기로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불붙처럼 쏟아졌다.

임진희 집담회장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강력한 처벌과 전담기구 운영을 촉구했다. 임 지부장은 "최근 논란이 된 광주 모 학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 3년 전 해당 학교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조치된 교사 2명을 제대로 징계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성비위 사건을 학교와 교육당국이 가볍게 여겨 더 큰 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임 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학교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로 규정하면서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조기에 공론화시킬 수 없었던 배경에는 학교와 교사 집단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같은 교사끼리의 잘못은 '교육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축소·은폐해왔다"고 꼬집었다.

임 지부장은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학교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성폭력전담기구 마련 ▲광주시 전체 학교 성범죄 전수조사 ▲학생 및 교사 성범죄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광주 모 학교 성범죄 원인을 '사립고', '입시 명문'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은 토론회도 있었다.

이민선 전교조 광주지부 부부장은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소위 말하는 입시명문 사립고다. 입시명문과 사립고에서 이번 성범죄의 원인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운영이 입시 위주로 되다보니 학생 자치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강압적인 지도와 폭력이 일상화된 탓에 성범죄가 공론화되거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수년째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 부부장은 또한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나 비리로 얼룩졌다"며 "사립고의 폐쇄성, 비리재단에게 교사 징계권

한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징계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부부장은 학교 성추행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교육청의 지도 감독권한 강화) ▲교사대상 성평등 연수 ▲교육청 차원의 페미니스트 교사, 학생 보호 등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교사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학교내 성폭력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나윤 광주시의원(교육문화위)은 "대학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거대한 존재"라면서 "이번 사건이 빚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있다. 피해를 드러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며 시교육청과 학교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 전시회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 전시회가 16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개막했다. 참여작가인 주홍씨가 먹물을 이용해 대형 화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환경 위반 업체 적발률 전국 최고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 사항 적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사항 적발률은 광주시(20.7%), 전북(16.5%), 부산시(15.5%)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광주는 관리대상 업체 838개 중 173개가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초과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12.6%(4만9000여곳 중 6000곳 위반)로 2016년 10.9%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또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 1인당 평균 64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5곳 대비 42%가량 증

가한 것이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는 최대 120곳(경기도)에서 최소 26곳(울산시)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시 1곳, 광역도 2곳, 기초 자치단체 10곳 등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남도, 울산시를 비롯한 경남 거창군·경남 하동군·경기 오산시·서울 동작구·서울 송파구·울산 중구·인천 계양구·인천 남구·인천 서구·전북 임실군 등이다. 광주시는 환경 위반 사업장 적발률에서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냈지만, 나머지 일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지는 못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석웅 첫 인사, 혁신과 거리 멀다"

전교조 전남지부 논평서 지적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교조위원장 출신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취임 첫 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취임 초부터 교육청 주요 보직자, 전남 22개 시·군 교육장 등 간부 공무원에게 일괄 보직사퇴서와 다름없는 전직신청서를 받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강도높은 인사 혁신을 외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평범한 인사였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논평서에서 "최근 단행된 9월 1일자 인사 발표를 보면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전교조위원장 출신에 맞지 않은 기존과 별반 다름없는 평범한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7월 9일 전남교육청은 '장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분청 장학관, 직속 기관장 등 교육연구관 전원에겐 전직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인사를 시사했다"며 "또한 7월 23일 인수 위 보고에서 장 교육감은 '폐거리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인사혁신 의지를 표명했다"고 거론했다. 이홍석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통화에서 "이번 인사는 규모로 보나 면면으로 보나 실망스럽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3 달뜨기 11:56
해질 19:19 달짐 23:15

바다 피서객 조심

해안가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 높겠다.

광주	맑음	24/35	보성	맑음	21/33
목포	맑음	24/32	순천	맑음	24/33
여수	맑음	24/31	영광	맑음	23/34
나주	맑음	23/35	진도	맑음	24/33
완도	맑음	24/32	전주	맑음	23/35
구례	맑음	21/33	군산	맑음	23/33
강진	맑음	23/32	남원	맑음	22/31
해남	맑음	23/33	축산도	맑음	25/30
장성	맑음	22/3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1.0~2.5	동~남동 1.0~2.5	
남부	면바다	동~남동 2.0~5.0	동~남동 2.5~5.0	
남해	앞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1.5~3.0	
	면바다(동)	북동~동 3.0~4.0	북동~동 3.0~4.0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3.0~4.0	북동~동 2.0~4.0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1:27	06:24
23:48	18:54	
여수	06:49	00:47
	19:17	13:22

◇주간 날씨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	☀	☀	☀	☀	☀	☀
22/35	23/35	25/35	25/35	25/34	25/34	25/34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늘어날까

대법원 11월에 공개변론

하급심 '65세 인정' 잇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택시 운전사인 A씨가 사고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당시 47세이던 A씨는 상대방 차량의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가동연한은 노동이 가능한 한계나이를 뜻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이나 영구적인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원심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보통 60세로 계산하는 경험칙을 인정한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원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봤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29년간 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늘어난 평균 수명과 공무원·민간기업의 정년비율 증가 등 사회 변화를 이유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례가 속속 나왔다.

A씨의 직업인 개인택시 운전사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모든 육체노동자에도 새로운 가동연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동연한이 연장되면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나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분석, 일반 국민의 생각 등 물리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SAMSUNG LG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